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제1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2012. 03. 29(목)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제1회 워크숍 계획

콜로키움(Colloquium)이란 "모여서 말하기, 대화하기"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로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방식을 의미

1. 개요

- 일 시 : 2012년 3월 29일(목) 15:00-17:3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 대 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연구원, 교수, 실천가, 공무원 등

2. 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3.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_ 이강익(충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협동조합의 개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역사, 개념, 이론적 근거)
 - 협동조합 왜 필요한가? 특히, 충남
 - 협동조합의 지역화 방안
 - 기타
 - 콜로키움 운영방법
 - 제2차 워크숍 주제 및 발표자 선정
- 토론
 - 지정토론자 2인 등 참석자 전원

4. 행사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5:00	15:05	5	◆ 개회 - 원장님 인사말	사회: 김종수
15:05	15:10	5	◆ 콜로키움 소개	송두범
15:10	16:00	50	◆ 발제자 발표	
16:00	16:10	10	◆ 휴 식	
16:10	17:30	80	◆ 종합토론 및 정리	

5. 참여진

구분	연구자	직 위	이메일	연락처
내 부 참 여 자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pres@cdi.re.kr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dbsong@cdi.re.kr	010-4763-6895
	신동호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위원	cyberdhs@cdi.re.kr	017-289-8990
	임준홍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jhim@cdi.re.kr	010-4515-8356
	허남혁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hurnh@cdi.re.kr	010-9356-0348
	강미야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maya@cdi.re.kr	010-2728-3373
	김종수	사회적경제센터 책임연구원	jskim@cdi.re.kr	010-7282-3531
	박춘섭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jacobp73@cdi.re.kr	010-2101-9554
	홍은일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pod00246@cdi.re.kr	010-5535-0246
	이민정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minjoung1006@cdi.re.kr	
외 부 참 여 자	김영관	충남도 사회적경제T/F 팀장	kimyoungkwan@korea.kr	010-3434-9710 042-251-2690
	김종수	충남도 사회적경제TF팀	kjs7031@korea.kr	010-5497-7031
	구진홍	충남도 사회적경제TF팀	maity@korea.kr	010-3403-8176
	이경선	충남도 사회적경제TF팀	life777@korea.kr	010-3151-6873
	박영송	충남도의회 의원	ysong71@hanmail.net	010-3400-0141
	전성환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jshwan65@korea.com	010-5436-9391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sunny@theseeds.asia	010-3242-6683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min@theseeds.asia	010-4692-7482
	추진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soilad@gmail.com	010-9923-0748
	박정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jhpinkle@hanmail.net	010-2560-9564
	이혁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nicesoo@hanmail.net	010-5307-8543
	민대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deepvery@naver.com	010-8021-3217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3peter@hoseo.edu	010-4082-5994
	전영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ymjeon@korea.kr	041-630-1771
	강난숙	대전소비자연맹	nansookkim@hanmail.net	010-3420-7156
	박기남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	san7284@hanmail.net	010-9962-9877

외 부 참 여 자	최옥란	한 살림 천안아산 이사장	OL0617@yahoo.co.kr	010-3076-9124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gabeeya@hanmail.net	010-9611-0615
	박상우	홍성 마을활력소	chamngo@empal.com	010-3440-6529 070-7727-8835
	조남준	미래농업 팀장	s9565038@gmail.com	010-3438-5881
	박찬무	(주)즐거운밥상	coldmoo72@gmail.com	010-3238-9134
	김지철	충청남도 도의원	saramaul@hanmail.net	010-4190-6150
	이은애	씨즈	aeunle@hanmail.net	010-8860-9451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poolppuri@gmail.com	010-3403-8176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tjlets@hanmail.net	010-3151-6873
	김종문	충청남도 도의원	kim2086@hanmail.net	011-301-2086
	김동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peter329@hanmail.net	011-276-7968
	이원호	(주)푸드코아	ju0547@fooco.kr	010-5416-0547
	홍은영	(주)푸드코아	cyberap68@naver.com	010-3395-6854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chungnamedu@hanmail.net	010-6258-1170
	박태구	중도일보	hebalaky@naver.com	010-2625-8142
	권성하	대전일보	nis-1@hanmail.net	016-856-6031

목 차

발 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이강익(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 P.1


토 론

토 론 1

박대호(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P.25

토 론 2

김성훈(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P.31



제1회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발 제 1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이 강 익

충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이강익(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

I. 머리말

-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고, 이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 이러한 기대감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제도적 틀의 마련 그 자체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지난 5년간의 사회적기업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위로부터의 하향식 제도 마련과 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최근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정부주도형’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에서 ‘지역사회주도형’ 생태계 조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 속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못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경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향후 새로운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 영국의 협동조합 연구자 Peter Davis(2002)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틀이 필요할지라도, 이러한 하향식(top down) 협동만으로는 ‘껍데기 협동조합’만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위로부터 만들어진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틀과 지원은 ‘영혼이 없는 몸뚱이(body without soul)’만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상향식 협동이 필요하며, 이 영혼은 지역사회(communitiy)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본 발제자 또한 유사한 생각이다.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맥락이자 목적이다.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지역의 필요나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경영의 기반이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지역주민의 출자(저축)에서 나오며,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를 통해 소비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지지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발제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건강한 협동조합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주도형 생태계조성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장에서는 협동조합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역화와 협동조합

1. 지역사회는 왜 협동조합을 필요로 하는가?

-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지역에 어떠한 충성심도 가지지 않는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은 다양한 지역문제를 낳고 있다.
- 예를 들어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대기업들은 기업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갑작스러운 기업이전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대규모 비용을 부과하고, 국제적 체인점을 통해 지역문화를 동질화시켜 지역문화의 공유성을 파괴하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 대기업의 지역지배와 탈지역화의 원인은 대기업의 ‘부재 소유(absence ownership)’에 있다. 즉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챙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수익배분은 대도시에서 있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의 운명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아니라 대기업의 유치나 정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성과 구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최근 대기업의 지역지배 문제와 세계화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화(localization)’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여기서 지역화란 지역사회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외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립(self-reliance)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화라는 개념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립성’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담고 있다.

1) 지역화론은 크게 ‘식량주권에 근거한 농업지역화론’과 ‘풀뿌리기업에 근거한 지역화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기업의 육성²⁾을 바탕으로 지역순환경제³⁾를 구축하고 지역블록화⁴⁾를 이루는 것이다.**

- 여기서 풀뿌리기업이란 지역주민에 의해 소유되고 지역주민에 의해 협동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기업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 공기업 등이다. 풀뿌리기업은 대체로 지역적으로 소유되고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환경 기준을 개선하며,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경기침체 시 여타 지역으로 이전유인이 적고,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승수효과를 더 많이 높여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등의 장점을 지닌다.

○ **협동조합이 풀뿌리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이유는 △ 지역사회의 필요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 소수 탈지역화된 투자자보다는 지역주민의 출자와 이용 그리고 민주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고, △ 조합원에 대한 배당 제한이나 자산 동결(asset lock) 등을 통해 기업 자산의 탈지역화를 강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첫째,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되었고 ICA의 7원칙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정관에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 사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둘째,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인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다수의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은 지역주민인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1인 출자좌수를 제한하고, 1인1표의 민주적 참여적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어 탈지역화된 소수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한 일부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사업체로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가입자격으로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셋째, 이외에도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자본의 탈지역화를 막는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이 유보금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공동재산으로 탈 지역화할 가능성이 적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일체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청산 시 남은 재산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할·지급할 수 없이 때문에 자산의 탈지역화 가능성을 더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다(안토넬라 노야 편저, 2012).

2) 슈만은 풀뿌리기업의 육성에 기반한 지역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로냐와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면서, “기업을 사회진보의 적으로 간주했다면 이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핵심은 “어떤 종류의 기업이 가장 잘 지역사회에 이해에 봉사할 수 있는가”이라고 주장한다.

3) 지역화론은 풀뿌리기업 육성 방안의 핵심으로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승수효과를 강조한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사회의 주요한 고민거리는 돈이 부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외부로의 돈의 체계적인 유출”이라면서 “지역경제 내의 기본개념은 지역사회 내로 들어가는 돈을 극대화하고 이후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건설, 풀뿌리기업 창업과 연금의 연계, 지역채투자법 강화, 조세정책으로 풀뿌리기업 법인세 폐지, 그리고 지역화폐 육성, 공공계약시 풀뿌리기업 우선권 부여, 독점관매권 부여 등을 방안을 제시한다.

4) 지역블록화란 노동, 환경,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블록’과 차별화하여 풀뿌리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간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 Kimberly A. Zeuli(1998)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특히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 첫째,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시장개척.

- 협동조합은 오늘날의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하여 소농, 소생산자,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독특한 조직형태로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기업에 도전할 수 있다.

○ 둘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정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일부 지역사회(특히 과소화 되고 있는 농산어촌형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신용, 돌봄, 보험, 교육, 육아, 주택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유일한 조직형태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조합원들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운영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이라면 지역사회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외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꿈꾸는 춘천 별빛유학센터는 외지 아동들의 지역유입을 촉진시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지키면서 지역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셋째,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 상당수의 생산자협동조합은 협동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판매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춘천 우리영농조합법인은 농민주유소 운영을 통해 면세유 가격을 낮추고 농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산물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춘천농민한우는 한우농가의 참여와 협동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영농조합법인과 농민한우는 지역주민에게 고임금 수준에는 미치지만 정규직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추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규 지역 농가공 협동조합이 잘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생산부문의 소득 및 일자리창출은 지역서비스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지역의 조세기반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넷째, 지역사회 통합.**

- 협동조합은 작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일부 지역에서 매장은 물품 구매를 넘어서는 소통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지역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토론의 장 마련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역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편 가르기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해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 **다섯째, 인구 증가.**

-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의 효과로 새로운 노동자와 그 가족을 끌어들이므로써 지역주민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 **여섯째, 인적자원 개발.**

- 협동조합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체로 농촌지역 리더십 개발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협동조합 이사회 참여는 기업경영, 의사소통, 집단적 문제해결 등 리더십 개발을 위한 경험 및 훈련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 **일곱째, 환경문제 유발 축소.**

- 협동조합의 활동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물, 전기, 하수도야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교통 혼잡 등을 야기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여타의 기업보다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지역주민이고,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 유사한 맥락에서 정원각(2011)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제시와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
-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
-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 활성화
- 조합원 교육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착

3. 충남은 왜 지역화를 필요로 하는가?

○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발전 문제⁵⁾이다.

- 즉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대기업이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 상당부분이 지역으로 귀속되지 못하는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 수도권은 타 지역으로부터 118조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여타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대비 비중은 47.8%이나 역외로부터의 부의 유입을 통해 귀속된 지역총소득(GRI)의 전국대비 비중은 57.9%로 증가하고 있다.

<표1> 광역경제권별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총소득(GRI) 현황(2010년 기준)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 (GRDP) (십억 원)	전국 대비 비중 (%)	조세전 지역 총소득 (GRI) (십억 원)	전국 대비 비중 (%)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십억원)	GRDP 대비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비중 (%)
전국	1,175,201.2	100.0	1,175,521.3	100.0		
수도권	562,150.9	47.8	680,284.0	57.9	118,133.1	21.0
충청권	137,079.8	11.7	102,915.1	8.8	-34,164.7	-24.9
호남권	115,495.0	9.8	90,345.8	7.7	-25,149.2	-21.8
대경권	115,751.2	9.8	97,999.9	8.3	-17,751.3	-15.3
동남권	205,259.4	17.5	170,043.9	14.5	-35,215.5	-17.2
강원권	29,147.1	2.5	24,317.0	2.1	-4,830.1	-16.6
제주권	10,317.5	0.9	9,614.6	0.8	-702.9	-6.8

주 : GRI = GRDP +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자료 : 통계청(KOSIS)에서 작성.

5)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 발전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강익(2011) 참조.

<표2>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총소득(GRI) 현황(2010년 기준)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GRDP) (십억원)	전국 대비 비중 (%)	지역 총소득 (GRI) (십억원)	전국 대비 비중 (%)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십억원)	GRDP 대비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비중 (%)
전국	1,175,201.2	100.0	1,175,521.3	100.0		
서울특별시	274,778.6	23.4	365,421.6	31.1	90,643.0	33.0
부산광역시	60,834.8	5.2	64,378.9	5.5	3,544.1	5.8
대구광역시	36,307.4	3.1	41,743.1	3.6	5,435.7	15.0
인천광역시	56,517.9	4.8	51,967.6	4.4	-4,550.3	-8.1
광주광역시	24,428.1	2.1	25,914.9	2.2	1,486.8	6.1
대전광역시	26,646.7	2.3	29,882.8	2.5	3,236.1	12.1
울산광역시	59,059.0	5.0	42,334.2	3.6	-16,724.8	-28.3
경기도	230,854.4	19.6	262,894.8	22.4	32,040.4	13.9
강원도	29,147.1	2.5	24,317.0	2.1	-4,830.1	-16.6
충청북도	35,988.8	3.1	28,052.3	2.4	-7,936.5	-22.1
충청남도	74,444.3	6.3	44,980.0	3.8	-29,464.3	-39.6
전라북도	34,546.9	2.9	28,455.6	2.4	-6,091.3	-17.6
전라남도	56,520.0	4.8	35,975.3	3.1	-20,544.7	-36.3
경상북도	79,443.8	6.8	56,256.8	4.8	-23,187.0	-29.2
경상남도	85,365.6	7.3	63,330.8	5.4	-22,034.8	-25.8
제주도	10,317.5	0.9	9,614.6	0.8	-702.9	-6.8

자료 : 통계청(KOSIS)에서 작성.

-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전국평균 대비 97.2% 수준이나 부의 역외유입으로 1인당 GRI는 117.6%이다. 반면 충청권의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114.9%이나 부의 역외유출로 86.2%이다. 강원권은 저생산성과 부의 역외유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표3> 광역경제권별 1인당 GRDP와 1인당 GRI 현황(2010년 기준)

시도별	1인당GRDP		1인당GRI		1인당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만원)
	만원	%	만원	%	
전국	2,326	100.0	2,327	100.0	1
수도권	2,261	97.2	2,737	117.6	475
충청권	2,673	114.9	2,007	86.2	-666
호남권	2,203	94.7	1,723	74.0	-480
대경권	2,225	95.7	1,884	81.0	-341
동남권	2,571	110.5	2,130	91.5	-441
강원권	1,905	81.9	1,590	68.3	-316
제주권	1,806	77.6	1,683	72.3	-123

자료 : 통계청(KOSIS)에서 작성.

-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부의 역외유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수도권의 부의 역외유입액은 GRDP 대비 12.6%였으나 2012년 21.0%로 증가하였다.

<표4> 광역경제권별 GRDP 대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의 비중(2001~2010)

시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도권	12.6	14.4	16.1	18.1	17.7	17.5	18	18.1	18.2	21
충청권	-16.6	-18.1	-18.1	-17.3	-19	-19.2	-19.9	-18.1	-22.1	-24.9
호남권	-11.4	-14.9	-15.9	-18.3	-19.9	-18.9	-19.5	-22	-18.5	-21.8
대경권	-10.1	-11.3	-13.6	-13.7	-14.3	-15.4	-14.3	-9.1	-13	-15.3
동남권	-13.3	-13.5	-15	-16.9	-15.7	-14.5	-15.4	-14.1	-14.9	-17.2
강원권	-9.6	-10.8	-13.3	-13.8	-13	-12.7	-13.5	-13	-11.8	-16.6
제주권	-1.2	-4.4	-8	-7.6	-6.6	-6.8	-8.1	-6.4	0.1	-6.8

자료 : 통계청(KOSIS)에서 작성.

<표5> 시도별 GRDP 대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의 비중(2001~2010)

시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21.7	22.8	25	27.9	28.5	27.9	31.6	28.1	28.7	33
부산	8.8	9.1	6.6	4.9	6.4	8.4	7.6	5.8	9.1	5.8
대구	18.1	16.2	15.7	17.1	15.2	15.3	12.4	15	16.3	15
인천	-8.8	-13.8	-10.6	-9.5	-8.1	-7.1	-7.1	1.2	-4.8	-8.1
광주	5.4	5.4	5.5	4.6	2.5	2.2	4.2	3.9	6.7	6.1
대전	11.8	9.5	11.2	11.9	12.5	16	16	14.3	13.2	12.1
울산	-31.4	-29.2	-32.7	-35.6	-32.5	-31.4	-30.4	-28.3	-30	-28.3
경기	5.8	10.5	10.8	12.7	10.5	10.7	7.7	9.6	10.7	13.9
강원	-9.6	-10.8	-13.3	-13.8	-13	-12.7	-13.5	-13	-11.8	-16.6
충북	-20.6	-20.5	-20.6	-21.4	-19.5	-21	-22.1	-17.1	-18.3	-22.1
충남	-27.7	-29.8	-30.2	-27.7	-31.9	-32.5	-33.2	-31.6	-37.1	-39.6
전북	-5.1	-8.8	-9	-11.5	-11.5	-11.7	-12.6	-11.5	-12.5	-17.6
전남	-23.9	-28.5	-30	-32.6	-34.9	-33.5	-34.4	-38.6	-33.2	-36.3
경북	-25.4	-26.1	-28.4	-28.2	-28.1	-30.1	-27.7	-20.8	-26.8	-29.2
경남	-19.7	-21.7	-21.1	-21.2	-22	-21	-22.6	-19.1	-22.1	-25.8
제주	-1.2	-4.4	-8	-7.6	-6.6	-6.8	-8.1	-6.4	0.1	-6.8

자료 : 통계청(KOSIS)에서 작성.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부의 역외유출의 주된 경로는 대기업의 본사와지사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영업잉여의 역외유출, 금융의 서울집중에 따른 영업잉여의 역외유출,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에 따른 대도시로의 종업원 보수의 역외유출이다. 따라서 해법은 법인기업의 지역법인화 촉진, 지역금융 재활성화,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직주분리 현상 완화 등이다. 더 중요한 대안적 방안은 풀뿌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이다.

III.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 20세기에 협동조합은 왜 주변화 되었는가?

- II장에서 “지역사회는 왜 협동조합을 필요로 하는가?”를 논의했다면 본 장에서는 역으로 협동조합의 생존가능성 논쟁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은 왜 지역사회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협동조합의 생존가능성은 논쟁은 “왜 20세기에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영리기업에 비해 주변화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 협동조합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에 비해 ‘과소투자’와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주변화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Wright, 2010a; 이승현, 1997).
 - 즉 협동조합은 담보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렵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는 대규모 자본을 마련하기 어렵고, 협동조합의 규모가 작아 기술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소투자 문제로 인해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없고 혁신과 생산성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 나아가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외부감시자(주주)가 없기 때문에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협동조합의 규모와 이질성이 증대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 실제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우가 많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는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담보요건이 취약하여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등 과소투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걸림돌이 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조합원의 이질성이 높아질 경우 조합원의 참여와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 협동조합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논점은 협동조합의 조직구조가 영리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협동조합의 외부감시자(주주)의 부재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내부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조합에 대한 참여와 헌신을 높여 생산성을 개선해 왔고, 동료들 간의 신뢰와 상호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해 왔다. 또한 최근의 주주의 단기투자 관행 등 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 조직구조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의 조직구조가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두 번째 논점은 과거 협동조합이 주변화 되었던 핵심 이유가 내적 비효율성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생태계의 취약성에 있다.

- 은행의 대출관행(담보)이나 영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리기업에게는 유리한 외부조건이 형성되었던 반면, 협동조합에 불리한 외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주변화 되는 주요한 원인이 협동조합의 내부구조의 비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조건(제도적 지원구조)의 마련이 협동조합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였던 1947년의 협동조합법의 사례와 1991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외적 조건(제도적 지원구조)의 마련이 협동조합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과소투자의 문제는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도 공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과소투자의 문제는 상당부분 제도적 지원체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조직화를 통해 과소투자와 규모의 경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과소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투자, 저소득층 대부, 환경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에의 대부 등을 포함한다”.

○ 따라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 제도적 지원체계의 구축, △ 협동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원연계 등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II.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무엇인가?

○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성장,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이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는 정부, 네트워크, 지역시민사회이다.

- 첫째,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둘째,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 연합회 등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 인적자원개발,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셋째, 지역 시민사회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시장 형성, 사회적 투자, 기부, 지역재단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표6>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세 가지 유형

기업의 핵심 역량	정부주도형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주도형 생태계 조성	
		네트워크 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
물적 자원	융자 지원	협동 금융	현물, 현금기부
인적 자원	인건비 지원	공동교육·인력개발	시간 기부(자원봉사)
지식(기술) 자원	사업개발비 지원	공동 기술협력	지식 기부
경영 노하우	경영컨설팅 지원	멘토형 교차컨설팅 공동 마케팅	프로보노
소비시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동적 내부시장	윤리적 소비시장
사회적 기반	제도적 기반 조성	협동적 기업문화 조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 조성

주 : 정부주도형 생태계 조성 내용은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 김을식 외, 2011을 재구성('네트워크주도형' 추가).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원들(정보, 금융, 설비,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결망”이다.
 -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어주는 지역별, 산업별 네트워크는 외부의 지식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조직의 다양한 역량들을 상호 연계시켜 혁신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네트워크는 개별 조직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더 큰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공통의 문화와 평등, 연대 등의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요안정을 중시하고 타 기업과의 장기적인 사업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영리기업보다 네트워크 형성에 더 유리하다.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한편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에서 기업 간 연계 수준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 ‘강한 연계형’과 ‘약한 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응집형태에 따라 ‘중앙집중형’과 ‘분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표적인 지역인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는 모두 강한 연계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양자의 차이라면 전자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분권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그룹으로 2006년 말 기준 제조유통부문 매출액은 약 133억유로, 금융자산은 약 123억에 달하고, 총노동자수는 83,601명이며, 바스크주 1위, 스페인 7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단위조합을 총괄하는 총회, 대의원대회, 4개 사업부문(공업, 금융, 유통, 교육연구)이 있는 ‘중앙 집중화된 강한 연계형’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몬드라곤이 중앙 집중화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단위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창립자들이 spin-off와 networking 전략을 병합적으로 선택한 결과였다.
 - 인구 400만명의 에밀리아로마냐는 1만5,000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지역주민의 2/3가 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지역내총생산의 약 절반이 협동조합에 의해 생산된다. 이 지역소득은 전국평균의 1.5배로 유럽의 122개 경제지역 중 11번째로 잘 사는 지역이며, 실업률은 4%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 지역은 중세부터 내려온 평등, 자율, 협동의 전통을 바탕으로 ‘분권화된 강한 연계형’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두 지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스스로 강한 연계형 네트워크라는 외적조건의 형성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표7>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형태

유형	정의	특징	거버넌스
수평적 연계 (업종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을 합리화하고,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과 기회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출자 - 비용과 위험의 상호공제 - 대량수요처 공급을 위한 공동대응(공동입찰) - 원재료의 공동구매 	위원회, 협회, 법인격을 갖춘 거버넌스
수직적 연계 (업종간)	부문별 전문화와 전체 생산연결망을 바탕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 속에서 만들어진 기업간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위 간 전문화 - 생산-유통의 연결망 구축 - 다수 기업들에 의해 활용되는 네트워크 	조정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금융적 연계	금융지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의 공급 - 일시·장기 지분소유 -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금융및기술지원 서비스 	사업활성화 를 위한 전략적 독립기구
고용연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내 타기업의 실직자를 우선 채용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지역)	전략적 조정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대표성과 로비 -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 네트워크 간 시너지창출 - 전체적인 공동서비스 - 기본적인 전략적 의사결정 	선거체계와 경영체계를 갖춘 거버넌스

자료 : Menzani ▪ Zamagni, 2009에서 작성.

<표8> 몬드라곤과 에밀리아 로마나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현황

	몬드라곤	에밀리아 로마나
수평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조합 간 자원, 서비스 공유 - 연구센터, 대학, 공제체계 - 단위별 전문화와 기술동맹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하청계약의 공동입찰 및 일거리 분담 관행
수직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문별 분사와 연계 - 생산, 유통, 서비스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생산시스템 속에서 고도의 전문화와 내부거래시스템의 결합 - 지역 재화와 서비스의 혁신적인 상호구매(매장 상품의 70%)
금융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민금고의 예금대출활동과 단위조합 회계의 중앙화와 통제 - 위험시 실질적인 금융연대 발휘 (기업 간 대부 및 상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협동조합개발기금 (Coop Fond)의 창설 및 제도화 * 모든 조합 잉여의 3%를 기금 * 청산시 잔여자산 기금으로 감 * 신규조합 설립 및 투자에 사용 - 상호대부를 보증하는 모임 구성
고용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조합이 경영위기에 처했을때 적정거리 내 다른 조합들은 실직 노동자들의 일부를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위기시 배분과 나눔을 통한 일자리 살리기의 공동노력 - 해산시 타 조합 실직자채용 노력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드라곤 총괄기구에 의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연합체(레가코프 등)의 조직화와 서비스 지원 역할

자료 : Halary, Isabelle, 2005에서 작성.

3.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 찾기

1) 강원도 사례

○ 2007년 이후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내 사회적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⁶⁾.

- 2011년말 기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68개이며, 이 6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의 2011년도 예상 연매출액은 416억원이며, 업체당 연매출액은 6억12백만원이다. 이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의 기업을 뺀 나머지 67개 (예비)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은 179억32천만원이고, 업체당 매출액은 3억46백만원이다(강원도 내부자료, 2011에서 작성).

○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정부 의존성 문제와 지속가능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 인건비지원'이라는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조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 결과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자원 동원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유지의 성과를 올렸으나 고용유지, 운영 및 경험부족,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수익창출 곤란 등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이 취약하고 정부의존성이 강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의 경우 도내 소비시장, 특히 윤리적 소비시장 여건이 취약하고 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의 업체당 매출액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곽선화, 2011).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손실은 20~4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를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기업은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풀뿌리기업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 홍보, 교육, 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자원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주도형'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 강원도내에 사회적기업 이외의 주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마을기업, 노인일자리사업단, 자활사업단, 생협 등이 있다. 도내 마을기업은 44개이며 연간 총 매출액은 약 84억원이고, 업체당 매출액은 1억91백만원이다(지경배, 2012). 또한 도내에는 6개 시니어클럽에 72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일자리사업 참여자수는 약 2,500여명이다. 자활사업으로 15개의 지역자활센터와 1개의 광역자활센터에 270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수는 약 2,500명이다. 도내 주요 생활협동조합은 5개이다. 원주한살림(4,800세대), 원주생협(1,200 세대), 원주의료생협(1,600세대), 강릉한살림(5,800세대), 춘천생협(1,500세대)이다.

- 최근 정부, 학계, 지역연구원 등에서도 정부주도형에서 지역사회주도형 생태계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을식 외, 2011).
-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는 경실련 및 YMCA를 참여시켜 중앙 및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민관협의체’ 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를 국민운동방식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민단체, 종교단체, 일반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나아가 최근 강원도 내에는 네트워크주도형 생태계조성의 단초가 열리고 있다.
- 도내에는 7개의 업종(간)네트워크와 5개의 지역네트워크 조직이 활동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들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풀뿌리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주·횡성에서는 지역차원의 협동금융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상호출자, 협동기금, 협동카드 등)이 준비되거나 전개되고 있고, 주거복지네트워크에서는 지역의 집수리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표9> 강원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2011년 11월 말 기준)

	명칭	창립 연도	소속 단체	(예비) 사회적기업
업종(간)	강원프리미엄연합회(청소네트워크)	2002	14	9
	강원도재활용네트워크	2000	8	4
	강원도주거복지네트워크	2002	15	1
	강원도돌봄사회적기업네트워크	2011	4	4
	강원도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네트워크(준)	2011	10	6
	횡성친환경가공생산자연협회	2009	12	3
	춘천로컬푸드네트워크(준)	2011	14	6
	7개		77	33
지역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03	19	6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09	15	6
	횡성사회적기업협의회	2011	6	6
	강릉사회적기업협의회	2011	11	11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2009	38	36
	5개		89	65

<표10> 업종별 네트워크 현안문제 및 행정과의 협의 사항

명칭	현안문제	행정 협의 사항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 사업기간 문제(현행 9개월) - 사업비 5년 동결(현 90만원)로 인한 수익악화, 최저임금인상폭 대응 어려움 - 부가서비스 개발 - 중학교까지 확대 ○ 신규 시장개척(사업개발) 필요 - 공동기획, 광역화, 전문화 	<p><도 및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입찰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가점 부여) ○ 현행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위탁 및 고용승계 <p><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개선 * 사업비 상향조정. 사업기간 연장 * 우선구매, 중학교 확대 검토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수거 시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수거의 어려움 ○ 낮은 판매단가 ○ 신규사업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선별장 위탁 시 우선권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규제완화 ○ 사업장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 ○ 강원도 재활용 대안지원센터 추진 공동논의 및 협력체계 구축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간병 제도화에 따른 공동병실 간병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에서 사회적 기업 참여를 위한 도의 강력한 행정지원과 정보 공유
방과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 대학중심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대응 모색 ○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강원도형 지역화 전략 수립 	<p><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제시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위탁 사전공시제 도입)
로컬푸드 (횡성 원주, 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직의 시설비 등 지원 ○ 공동물류체계 확립 및 판로확대 ○ 원료수급 및 가공품 판매에서의 지역거래 확대 ○ 안정적 원료수급 위한 계약재배 ○ 신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시스템 안착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 판로확대를 위한 자원 연계 ○ 로컬푸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지

2) 원주 사례

○ 원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전개 과정

- 1960년대 신탁운동과 교육운동
- 1972년 원주밝음신탁 창립
- * 지역저소득층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보호/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1970년대 원주캠프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과 남한강대홍수를 계기로 한 강원남부권 농촌 및 광산지역 협동운동 전개(신탁/소협)
- 1980년 생명사상과 운동에 관한 문서의 제작과 독회
- 1981~84년 정기적인 일본 유기농업/생협운동 견학
-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 1993년 원주한살림) 한국 최초 창립
- 1989년 호저지역 농민 중심의 호저생협 창립(→ 2000년 원주생협)
- 1999년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창립
- 1999년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설립
- *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운영(실업극복국민운동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참여
- 2001년 천주교원주교구 사회복지회 원주자활후견기관 위탁
- 2002년 원주의료생협 창립(밝음신탁,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공동발의)
- 2003년 삼도접경지역 농민 중심으로 남한강 삼도생협 창립
- 2003년 6월 원주협동조합협의회 창립
- 2003년 12월 원주협동사회연구원(현 협동사회경제연구원) 개원
- 이후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2005년), 상지대생협(2006년), 참꽃어린이학교(2007년), 노인생협(2007년) 등이 가입
- 2008년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 2009년 이후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가입하기 시작함
- 2009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 2010년 원주푸드조례 제정, 민관협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 중
- 2010년 사회적기업육성조례 제정 등 원주시와의 적극적인 민관협력 추진
- 2011년 '원주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행사를 계기로 협동조합간 상호부조 협약 추진

○ 특히 2000년대 원주지역 풀뿌리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창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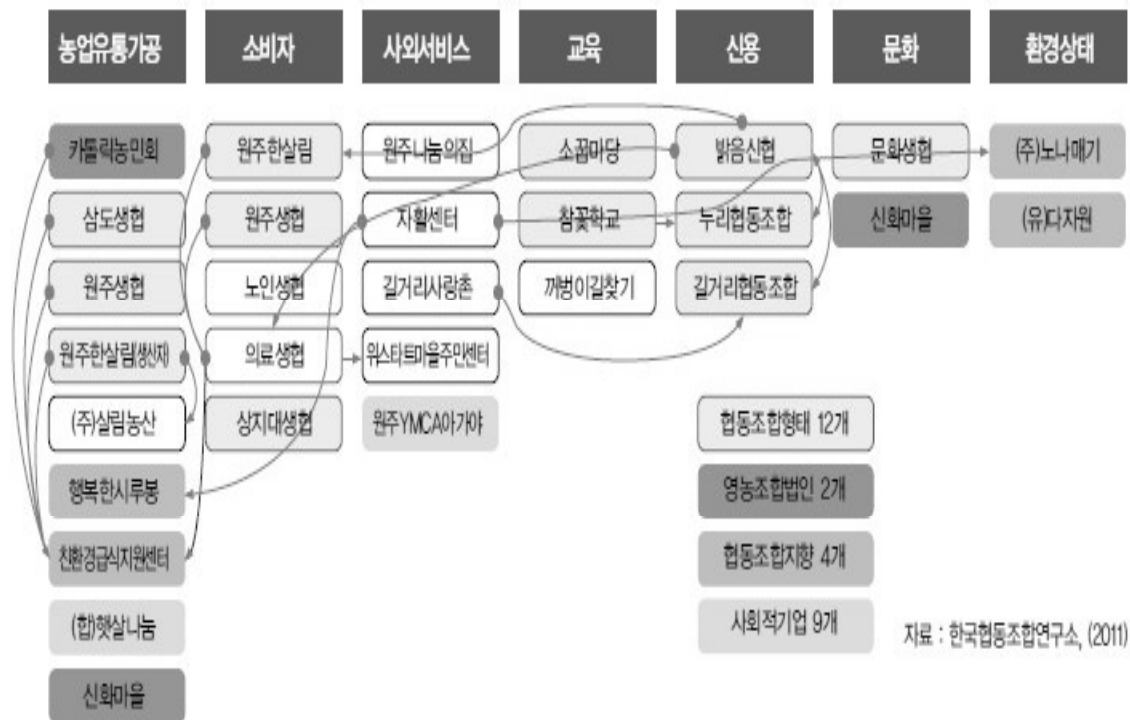
-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2000년 원주한살림/원주생협의 통합 논의의 실패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젊은 활동가 중심으로 협동조합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고, 2002년 일본 고베, 오사카지역 연수를 통해 활동가간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였다. 여기에다가 밝음신탁, 한살림, 원주생협의 공동발의를 통한 의료생협 설립 경험을 토대로 협동운동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목표로 8개 단체가 참여하여 협의회를 창립하였다.

- 원주협동조합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 네트워크 강화 활동 : 정례회의, 임원연수회, 임직원단합대회, 송년의밤, 공동신문<원주에 사는 즐거움>발간, 가을걷이 생명농업 대축제
- * 국제교류 활동: 한일협동조합간 교류, GMO FREEZONE 운동, 기술연수 등
- * 지역의 미래만들기 : 3대 조례제정 운동, 화상경마장반대운동,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만들기, 로컬푸드운동,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활동

○ 원주네트워크의 의의와 가능성

- 네트워크는 협동조합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고,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동가간의 연결망, 가치공유, 지역정체성을 함양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집약되어 협동조합운동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전환 이후 '협동조합 간 협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출자, 협동카드, 협동적 내부시장 형성, 공동교육 등의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풀뿌리기업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정립해가고 있다.

〈원주시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 참여조직 및 관계망〉



3) 춘천 사례

○ 춘천지역 풀뿌리경제 운동의 전개 과정

- 1990년대 초 서면 서상리와 금산리 지역농민 중심의 새땅공동체 결성
- 한살림 매장설립 및 봄내생협 창립 → 해체
- 1995년 춘천/화천지역 유기농가와 시민의 직거래 시작 → 방주공동체 결성
- 1998년 춘천YMCA 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협의회(춘신험) 창립 : 실직가정돕기 및 실업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춘천나눔의 집과 공동으로 자활지원센터 추진 -> 2000년 춘천나눔의집으로 실업관련운동을 위임하고 해소
- 2000년 춘천나눔의 집 창립, 2000년 8월 자활후견기관 지정 받음 : 춘천나눔의집 운영구조에 대한 사회운동조직의 참여계획 무산, 지역사회운동과의 연결고리 및 정체성 약화
- 2001년 방주공동체를 토대로 춘천생협 창립
- * 이후 춘천생협은 학교급식운동 참여, 생산자위원회 구성, 아토피 가족 및 마을모임 추진, 2008년부터 생명운동에서 지역살림(local food)운동 전화 노력으로 매장 내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직거래장터, 도농교류행사, 산지참여활동 확대, 쌀 수매 출자금 마련 운동
- 2003년 이후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니어클럽 등이 생겨났으나 개별단체 중심의 사회적일자리/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 풀뿌리기업을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네트워크 취약
- 2006년 6월 춘천지역고용포럼 결성
- * 이슈중심형 사회운동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대안경제운동 필요성
- * 핵심 방향을 '시민사회주도형 고용친화산업 육성'으로 잡음
- * 3개 분과 운영 : 환경농업분과, 사회서비스분과, 문화관광분과 운영
- 2007년 고용포럼 내 환경농업분과를 기반으로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창립
- 2008년 고용포럼 내 사회서비스분과를 개편하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
- 2008년 6월 춘천지역 먹거리순환위원회 창립
 - * 고용포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생협, 노동복지센터, 시민연대, 민우회 참여
- 2008년 7월 춘천노동복지센터 '소비자회원직거래'(CSA) 시범사업 추진(40가구)
- 2008년 12월 먹거리순환위원회를 해소하고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봄내살림) 시작
- 2011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1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 중임.
- 2011년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을 위해 '협동도시' 창립(춘천노동복지센터와 통합)
- 2011년 춘천체험학습네트워크(준)와 로컬푸드네트워크(준) 창립


4)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건은 무엇인가?

평가기준	원주	춘천
전통과 사회운동에 근거한 집단적 정체성(공동문화)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부터 원주는 협동조합 및 민주화운동의 한국적 성지 역할 ○ 1990년대 밝은신협, 한 살림을 통해 계승 -> 지역사회 및 사회운동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미침 -> '협동조합 간 협동'의 문화 조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은 1990년대 우리밀살리기운동, 봄내생협 등의 실험이 있었으나 대체로 실패하면서 협동조합의 전통과 정체성 형성 미흡 ○ 방주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춘천생협을 통해 협동조합의 명맥 유지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시민사회(및 학계)의 '지역의제 형성'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의료·주거문제를 의제화 ○ 학교급식 문제를 계기로 로컬푸드 의제화 ○ 화상경마장 문제 등 다양한 이슈 개입 및 의제화 ○ 상지대와 지역협동조합의 공동참여로 원주협동사회연구원 창립(아카데미 및 로컬푸드 연구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선 의제화 노력 미흡 ○ 예외적으로 2008년 로컬푸드 의제화 ○ 2006년 고용포럼을 계기로 한림대와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로컬푸드 및 네트워크 형성에서 역할) → 포럼 해소 이후 연구자와 활동가간 연계 약화
협동조합간 연계(connectivity)와 조정네트워크 형성 (플랫폼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살림과 원주생협의 통합의 실패 경험 → 협동조합 간 연계 및 조정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 → 2003년 협의회 창립 ○ 연구모임 및 해외 교류를 바탕으로 한 비전을 갖춘 활동가간 이념적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춘실험의 해소 이후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운동 간의 연결고리 단절 →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개별화된, 정부 의존적 사업 풍토 형성 → 활동가간 공동의 비전 및 정체성 형성 미흡 ○ 고용포럼을 계기로 2008년 느슨한 형태의 조정네트워크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
중추기업의 존재 (선물경제 모델) - 자신의 자원을 제공, 공유하고 화폐 대신 존경과 신뢰가 통용되는 경제 → 중장기적인 수요와 사업기회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환경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려면 중추기업이 필요 ○ 밝은신협, 한 살림이 선배기업이 중추종의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생협운동의 실패 ○ 2000년 창립된 춘천생협은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과 내부 역량 한계로 중추적 역할 한계

<p>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혁신과 틈새시장의 창출 (개방적 협업모델)</p>	<p>○ 협동조합은 활동가들이 지역에 머무는 거처 역할 → 부분적인 외부 인재 유입 ○ 외부와의 연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적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의 존재 ○ 혁신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통구조 및 공동사업 구조 존재 ○ 이는 부분적으로 내적인 피로감으로도 작용</p>	<p>○ 지역활동가의 외부유출 및 지역 내 자리찾기의 어려움 (풀뿌리형 운동 풍토 미흡) → 외부 인재 유입 미흡 ○ 외부와의 연계망을 갖춘 역량있는 활동가가 존재하였으나 지역사회 내의 뿌리내리지 못함 ○ 혁신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통구조 및 공동사업 구조 취약</p>
<p>상호보완성 (생산적 협력)</p>	<p>○ 조정네트워크와 활동가간 연계성을 바탕으로 도구적 연대를 넘어서서 상호간의 역할을 정립해가는 토론 및 협력문화 정착 → 상호출자, 상호구매 ○ 원주는 현재 생산적 협력을 갖추는 실험 단계</p>	<p>○ 2010년까지 조정네트워크는 단체 대표의 친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실무 수준의 활동가간 연계 취약</p>

< 참 고 문 헌 >

- 안토넬라 노야 편저, 2012, [사회적기업 영역, 어디까지인가?],
OECD/함께일하는재단.이강익, 2011,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발전”,
[지역사회학](제13권 1호).
Halary, Isabelle, 2005, [Cooperatives in globalization: Network as a Solution].




제1회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1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 대 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대호(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한다. 지난 수년간 한 사회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환경, 생태, 경제, 식량, 사회적 위기는 수많은 도전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우리는 승리의 여신이 도전자의 편에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전히 응전의 토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힘의 대단함과 세력의 광활함에 혀를 찰 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월러스틴은 그의 저서 “세계체계 분석”의 끝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 한다. “결국 세력관계에 의해 다음 세상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안타깝게도 필연적 낙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미래가 달려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이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 두 제도 모두 정부주도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치적 판단이든,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든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화전략으로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역사 이래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몬드라곤이나 볼로냐의 성공적인 사례는 대안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제도화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이어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차분히 대응하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이 제도화 된 이후에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실망이 진행형에 있다. 물론 이런 실망은 부정적인 일면만 반영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화 되면서 사회적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역할은 퇴색하고 창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발빠른 사람들의 전유물로 기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제도의 문제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제도만을 탓하며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사회적기업의 모습이 과연 제도의 탓인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지점이 많은 것 같다. 사회적기업 육성제도는 시민사회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리 건강하다고 인식되지 못하는 듯하다.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할 때면 인증요건 구비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에 피로감이 몰려온다.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가슴 뛰는 제안은 지루한 무용담으로 비취지는 듯한 분위기다. 우리에게 사회적기업은 어떤 의미일까? 혹시 협동조합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협동조합자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가능한 치열하게 원래의 취지에 복무하는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한 사회적기업에는 뺏속까지 사회적목적을 새긴 기업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담은 협동조합을 하고자하는 주체의 발견과 재생산에서 찾아야 하는게 아닐까? 주체의 준비 없이 협동조합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오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다행히 사람이 찾아들고 있다. 지역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원칙과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겠다.

다시 사회적기업을 거울삼아 보면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유보하며 살고 있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익의 사회환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등등 기능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산한 우리는 이제 냉담한 시선으로 사회적기업을 바라본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명제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사회적목적을 충실히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존재의미가 있는 것일까? 차라리 사회적목적에 관심을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적목적을 달성하는 유형으로 일자리제공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제공만으로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따르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란 굳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일반기업에 재정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만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시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적’ 성격이다. 이는 ‘공익적’ 측면을 이야기 하는데, 주요하게 활동의 내용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표현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 목적들로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의 전달, 낙후지역 지역발전, 친환경적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었거나 사회복지 전달체계들이 국가를 대행해서 담당하던 영역이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역할을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담하면서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성격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개인들의 연대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술, 경영능력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실업, 장애,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없다면 기존의 기업 혹은 정부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활동 내용 자체보다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과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5년짜리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 아닐까? 그 다음은 5년 후에 다시 고민하고 말이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은 사회적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은 이러한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협동조합에도 시사점을 준다. 협동조합의 근본 취지가 아닌 창업의 한 유형으로 확산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변방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맬 것이 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하향식 운영에 우려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불멘소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가? 정부가 만들어주는 여건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를 제대로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에서 내용을 채워가는 주체의 문제에 더 많이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변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지역마다 자각하고 실천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홍기빈은 사회적경제는 살림살이와 관련된 영역이고 인간발전 원리를 담아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 안에서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낮고 풍부한 인간이 되었는데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사회적기업에게 빠져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파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협동조합은 기업활동 이전에 살림살이와 인간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운동은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풍부해지는 과정 이어야 한다.


발제문에서 강원지역의 네트워크 주도형 생태계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주를 비롯한 춘천 등의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히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에서는 강원도의 네트워크 현황을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현안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형적 규모와 영역별 사업과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가 지역 혹은 영역별 조합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의 질적 분석과 사회적경제차원의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연합과 조합으로 사회적경제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에서도 사회적경제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의 실업운동을 시작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을 바탕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최근에는 복지단체와 마을기업 및 자생적 공동체들과의 협의를 넓혀가고 있다. 향후에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유구조와 운영원리는 물론 생존방식에서 그동안의 영리기업이 가진 다양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하면서 두 가지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안 과제의 실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틀에서 중장기적인 지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우선 현안 과제는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이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지역차원의 사회적회계 도입과 사회적기업 협의회의 결의를 통한 정체성 찾기에 노력중이다. 영역별로는 수년간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과, 자원순환포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전략화이다.

큰 틀에서는 지역의 주체를 재발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설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영세하고 일부업종에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장기적 포석을 논의 중에 있다. 금융, 제조, 유통, 지식부문으로 중장기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주체를 발굴하고 재생산하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킹을 조직해 내야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 자산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김 성 훈
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김성훈(대전민들레의료생협 부이사장, 한국의료생협 정책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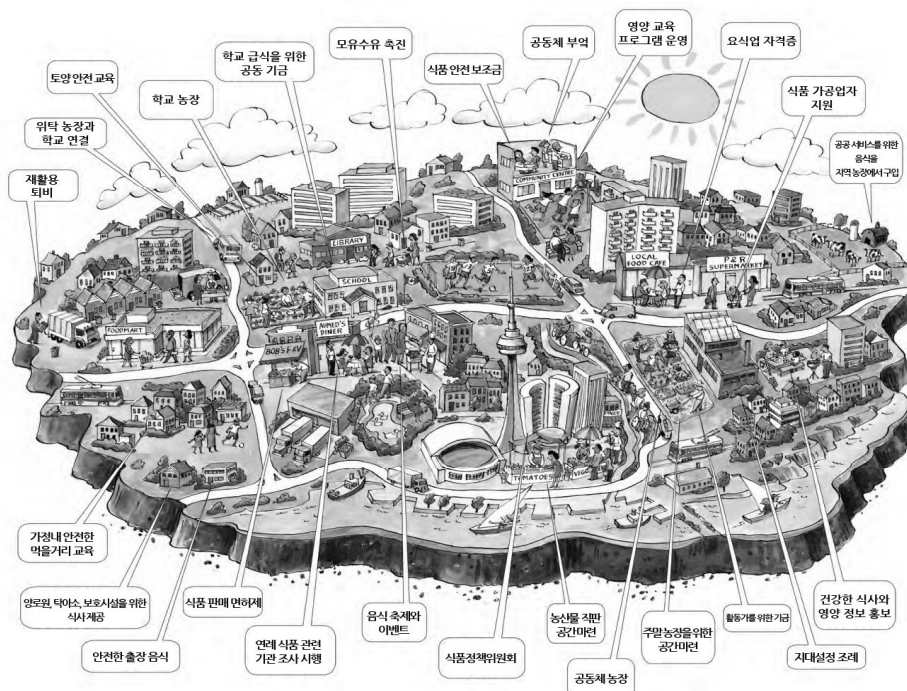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첫째, 이해관계 대립의 원리가 아니라 상호연대원리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던 사람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변형된 주식회사 등의 투자자소유기업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이중 간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연합회 건설을 통해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의 꿈에 보다 다가갔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영리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조직으로 이분화한 것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그 자체로 비영리조직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재분배 영역에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본법에 따라 출현하게 될 협동조합들이 투자자소유기업의 폐해를 극복하며 사람을 위한 경제, 대안경제, 다른 경제를 만들어가는 블록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것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 영리행위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변용하는 부류가 생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된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연합회 구성을 할 수 없고 협의회 정도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선의를 가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개인 간의 결사자들은 이 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협동조합 7원칙은 협동 조합인들의 꿈인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원칙이다.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는 사업구역의 측면에서 볼 때 책임질 의사가 있는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제 2원칙 민주적 관리는 일상적인 생활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 제 3원칙 경제적 참여 역시 사업의 이용을 전제로 출자와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밀착형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제 4원칙 자율과 독립(자치와 자립)의 원칙은 그 자체를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며 전국단위로 결집할 때에라도 지역차원의 자치와 자립이 우선한다. 제 5원칙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제 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도 이와 같다.
- 협동조합 위기의 3단계,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는 모두 협동조합이 지역화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위기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핵심 경쟁력은 “조합원” 그 자신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살아가는 지역의 진전만큼 협동조합의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은 레이들로보고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레이들로박사는 구체적으로 21세기의 협동조합을 내다보며 다음을 제안한다.
- ①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②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작업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 ③ 종래의 소협은 단지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조합원에게만 봉사하게 될 것이다.
- ④ 도시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마을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개별협동조합, 특정 분야의 협동조합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핵심경쟁력으로 하고 나아가 연합회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발전경로가 된다.
-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핵심은 시장이다. 현재의 시장은 대자본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양극화, 실업, 무분별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공동체 파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꿈에 입각하여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호혜시장구축을 핵심 슬로건으로 세운다.
- 호혜시장이란, 개인의 이윤추구라는 동기로 화폐를 매개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물신화된 경쟁 시장을 극복하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 “주고, 받고, 되돌려 주는” 호혜와 증여의 시장이며 선의를 가진 자들의 이타적인 만남을 통해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해나가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관계지향적인 시장인 만큼, 단지 거래를 넘어 정이 살아나며 노래와, 춤이 있으며 인간다움을 향한 기도와 성찰이 있는 시장이다.
- 호혜시장의 기본 나눔은 먹을거리가 그 출발이 된다. 먹을거리는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동체적이고 호혜적인 생산기반을 전제로 한다. 식구(食口)란 개인화된 하나의 가정(Family)이 아니라 함께 먹는 입으로서 공동체(Community)이다. 다시 이 먹을거리는 농업의 결과물이므로 <농업-공동체-먹을거리> 인류생존의 필수요소이면서 그 자체로 호혜적이어야 한다. 레이들로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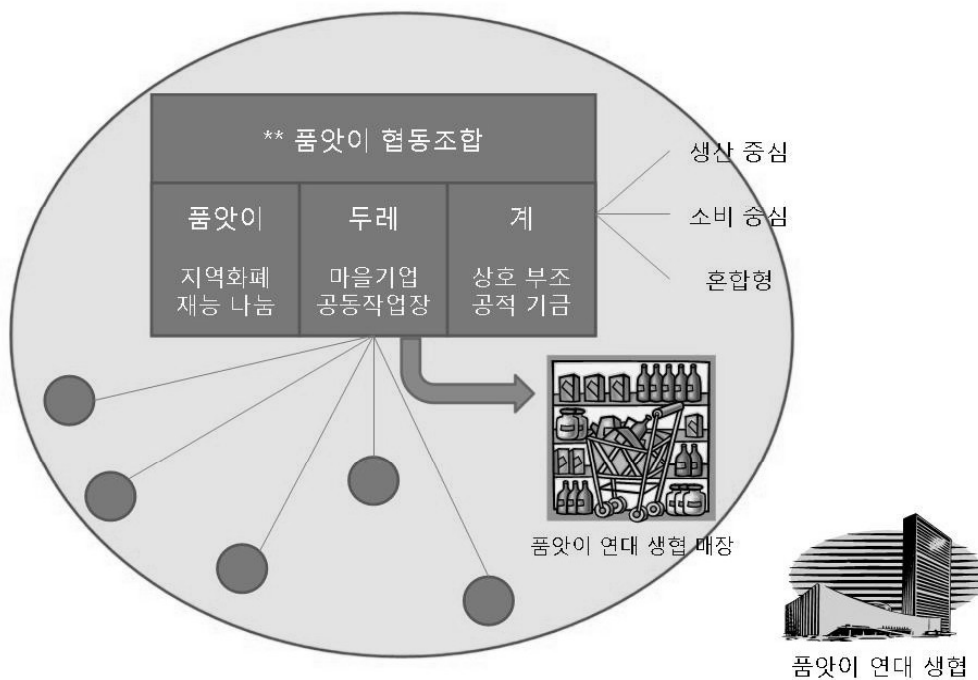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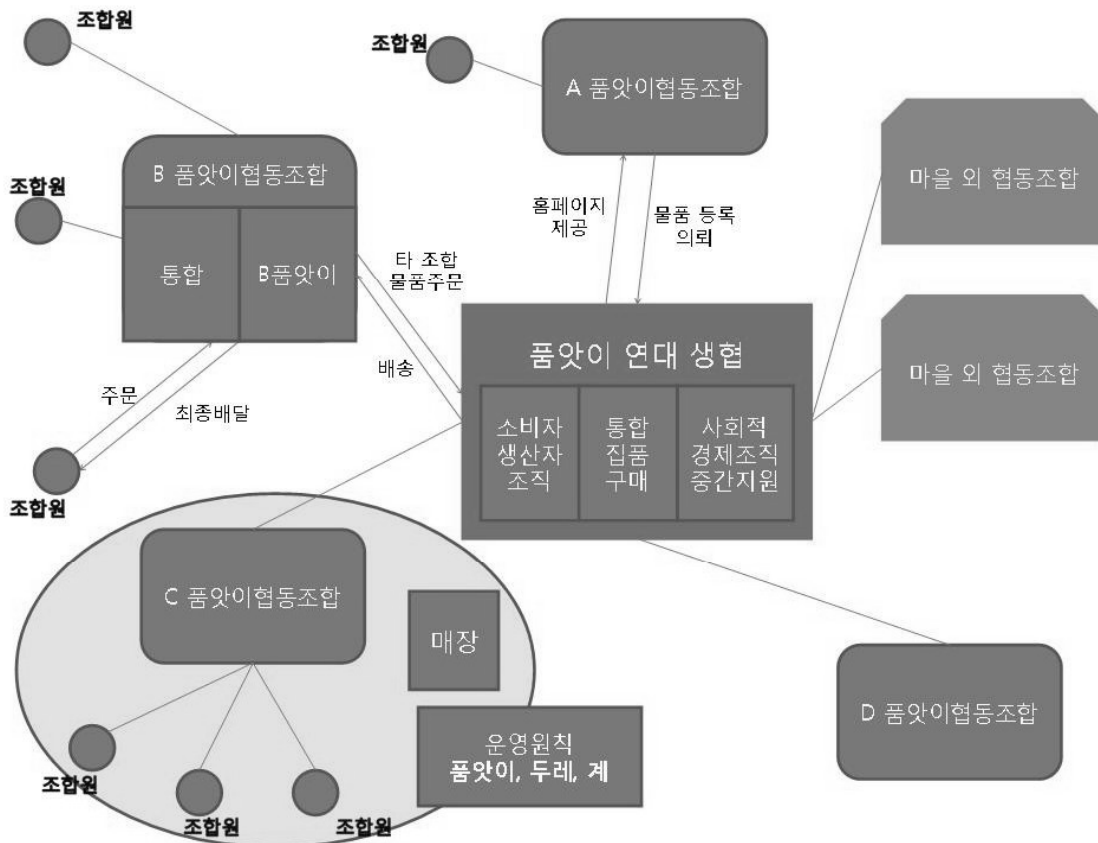
- 현재 먹을거리의 생산, 소비, 유통은 점차 대자본의 지배하에 있다. 종자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급속히 왜곡 재편, 독점, 파괴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구매 생협이 일정 성장을 하였지만 자본의 공격적 시장개척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협마저 자본의 논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세 가지 위기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자치와 자립의 식량조달, 대자본으로부터의 방어라는 가치를 들어 먹을거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조직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상호 독립적 결사체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연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연합 사업단을 구성하여 내식, 외식, 단체급식 분야에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식생활습관의 변화를 읽어 다양한 가공영역에 진출해야 하며 문화적인 운동으로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로컬푸드, 얼굴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이라고 한다.
- 대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빌어 다음과 같은 비전도를 상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생협간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대전의 25개 식품 연결 고리
(25 Food Connections to the City of Daejeon)



- 협동조합운동의 핵심은 소비자란 이름의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소비자 이기만 한 인간존재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주민은 “고객” 혹은 “소비자”로 호출되어 자본의 대량생산 시스템의 생산물 소비를 강요당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것은 얼굴이 보이고 인간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투자자소유기업의 임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마을 안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함께 협동조합으로 생산하고 부족한 것은 이웃마을과 나눌 수 있는 상시적 구조를 만들어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안으로 자급과 자립, 자치를 지향한다.

- 그 출발은 마을협동조합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영국의 지역사회 이익회사나 캐나다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같이 복합적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관계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조직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우리의 전통 협동모델로는 품앗이, 두레, 계를 동시에 해나가는 조직이다. 품앗이는 1:1 노동력 교환은 물론 다자간 품앗이를 가능하게 하는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나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 중인 감가하는 환전 지역화폐 모델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순환하는 호혜적인 나눔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레는 공동작업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해당될 것이며 계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공제조합,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을 통해 금융자본의 폐해를 극복한다. 이렇게 마을단위, 풀뿌리 차원의 협동조직이 살아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경제의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고 이는 다시 개별 조직들의 생명력을 강하게 할 것이다.



-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이탈리아 볼로냐와 트렌토, 몬드라곤 공동체, 그 외 서구유럽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도 홍성의 풀무공동체, 원주의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공동체, 그리고 지역화폐와 농업생산자, 의료생협, 자영업자들이 결합된 대전의 사례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지속적인 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학교가 있다는 점, 둘째, 단지 소비자 조직이 아니라 1차생산물부터 서비스분야까지 생산의 영역에 건실한 협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먹을거리를 기본으로 다룬다는 점, 넷째, 대안적인 금융기관이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이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지역 언론 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향후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 한편 협동조합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이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과 더불어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때 사회의 주역으로써 자기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 유럽의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이 노동자운동이 기반이 되었던 것과 한국의 굴절된 근현대사가 그것을 방해해온 결과가 협동조합 생태계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 핵심지점이다. 둘째,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운동의 발전 경로상 자기분야로 집중하고 분열해가는 것 역시 필요하나 이것은 다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공통된 지향을 통해 통일되어야 한다. 자기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전략이 우리에게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연대하고 협동해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확정하여 가능한 것부터 공동행보를 시작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중대하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을 감당해내는 사업체 의료생협, 혹은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지역별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격으로 현재의 의료생협을 지역사회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정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관여금지에 의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치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생산하여 정치인과 정당을 협력을 구하거나 때로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는 금융이나 공제사업 분야의 진출이 제한된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향후 이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 사회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협동조합운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한계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 이러할 때 다른 운동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이 개발된다. 실제 개별 협동조합이 사회전체의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것의 해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협동조합내의 노동과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기본 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 재벌구조 혁신 등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더불어 변화되어갈 때 상호연대의 관계원

리를 확산시켜 나가는 협동조합운동이 비로서 힘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선후의 문제라기보다 동시적 문제일 것이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 협동조합 공화국이라는 꿈이 있다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말하게 될 것이다.

- 소비자에서 조합원으로
- 전국연대에서 지역연대로, 마을로
- 상층연대에서 하방연대로
- 동종연대에서 이종연대로
- 조합연대에서 조합원 연대로
- 이념연대에서 사업연대로
- 이슈연대에서 생활연대로
- 정치의 대상에서 정치의 주체로

○ **하방연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름이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손을 내미는 연대를 하방연대라고 부릅니다. 한 사회의 역량은 내부 소모를 줄이고 통합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통합은 낮은 곳, 약한 자와 연대해 나가는 하방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신영복)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CDI세미나 2012-14

제1차 사회적경제클로키움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
- 인쇄일 : 2012. 3. 29
- 인 쇄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